

# 운동부 학생들 무리한 경기일정에 혹사·사고 위험

### 광주 초등 배드민턴팀 청송서 교통사고 코치·학생 7명 중경상 전용차량 없어 코치가 승합차 빌려 직접 운전해 대회 참가 경기시간 지연에 식사도 못하고 밤 경기 건강권 침해도 심각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데다 무리한 경기 일정 때문에 혹사당하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4분께 경북 청송군 파전면 국도에서 광주 모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6명과 A코치가 탄 승합차가 1t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선수와 승합차 운전자인 코치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선수 3명은 중상으로 진단돼 광주지역 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제23회 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치르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승진 화물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병원 치료 중인 A코치에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부실한 학교 운동부 안전대책이 드러났다.

이 학교는 운동부 전용 차량이 없어 대회 기간 승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회 기간 경기장과 숙소를 오가는 일정 때문에 승합차 등을 임차했다. 실제 광주에는 체육고와 동성고를 제외하고 운동부 전용 버스가 없어 대부분 학교에서 차를 임차해 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한계 때문에 운동부 운영 학교에 전용 차량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광주 뿐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들이 핸들을 잡고 있다는 데 있다. 대회 참가 선수를 코칭하면서 학생 못지 않게 피로가 누적된 지도자가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 A코치도 직접 운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안전 담당자가 동행하도록 규정한 제형학과 달리 운동부에는 이런 매뉴얼이 없어 A코치와 동행할 안전 요원도 없었다. 운동부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뚜렷한 안전대책도 없이 전국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지도자들이 아이를 태우고 운전해 항상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학생 연령을 감안하지 않은 경기 일정 때문에 건강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광주 학생들은 사고 당일 오후 3시30분 완월초등학교와 경기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6시에야 경기를 시작, 7시30분까지 점점을 지냈다. 이 때문에 밤 8시에 숙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 학생들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경기에 나섰다. 일부 학부모는 '밤 9시까지 경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학교 스포츠 전문가들은 "경기 지연은 주로 배드민턴과 테니스 등 긴 랠리가 이어지는 세트제 경기에서 발생하는 데 결국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혹사당하게 된다"며 "대회 주최측에서 성인기준으로 경기를 치를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 정신적 연령을 고려해 경기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경기 지연을 감안해 미리 예비일을 지정해 해당 경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명간 학생 선수는 물론 지도자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부 안전관리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버이날 케네이션 전하는 동심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케네이션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행불자 문미숙양 유가족 손해배상 인정

### 정부에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 된 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5·18 행방불명자인 문미숙(당시 10세)양의 형제자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양 유가족에게 각 2600여만~2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문양은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엄마와 함께 학동삼거리를 지나던 중 엄마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하고 총소리에 놀란 사이 행방불명됐다. 문양의 모친은 딸을 잃은 충격에 이듬해인 1981년 사망했다. 문양은 1989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돼 그 해 사망한 것으로 확정됐다.

부친은 1997년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2010년 사망했다. 지난해 5·18 정부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불자 묘역을 찾아 문양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게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문양이 행방불명 됐으므로 입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관이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르면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노천탕 익사 70대, 지병 있었어도 보험금 지급

### 광주지법, 자녀들에 승소 판결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던 70대 노인이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더라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는 A씨의 자녀 4명이 손해·생명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각 3875만원과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에 나섰다 새벽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있는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사망의 원인은 익수로 우발적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A씨의 보험사 2곳은 "A씨가 지병을 가

지고 있어 순환기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법의학교실의 사체검안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등의 결과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A씨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 감정에는 "A씨가 온전육 중 순환기계 질환 악화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순환기계 질환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A씨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숨진 만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중국총영사, 광주인권상 홍콩 인권변호사 수상 철회 요구

### 5·18기념재단 항의 방문

5·18기념재단이 최근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항팅(鄒幸婷)씨에게 2023년도 광주인권상을 수여하기로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수상 철회"를 요구하며 유감을 표했다. 5·18기념재단은 장청강(張承剛) 주광주 중국총영사가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초우항팅씨에 대한 광주인권상 수상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총영사는 재단 측에 "초우항팅씨는 중국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범죄자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폭력 범죄자에게 인권상을 준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초우항팅씨는 '천안문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홍콩 정부는 승인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초우항팅씨를 구금했다.

하지만 재단은 "이미 결정된 수상 계획을 물릴 수 없다"며 수상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국가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국가 간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이 광주인권상 수상 계획과 관련해 다른 국가로부터 정부 차원의 항의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